

# 목마른 '금융의 메기'... 케이뱅크 자본확충 산넘어 산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  
실권 대비... 신규 투자자 물색

은산분리 완화 논의 지지부진 속  
신상품 지연 등 경쟁력 악화 우려

케이뱅크가 출범 이후 증자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작년 말까지 끝내려던 2차 유상증자가 올해 7월까지 미뤄진 가운데 실권주에 대한 처리는 물론 추가 자본확충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3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총 3000만주의 신주 중 보통주 2400만주, 전환우선주 600만주로 진행된다.

〈주요 주주사 지분율 현황〉

(2018.5.30. 보통주 기준)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	비율
(주)케이티	6,047,700	10.00%
(주)우리은행	8,341,100	13.79%
엔에이치투자증권(주)	6,047,700	10.00%
한화생명보험(주)	5,692,000	9.41%
(지에스리테일	5,600,000	9.26%
(주)케이지이시스	4,000,000	6.61%
(주)다날	4,000,000	6.61%

이사회가 결의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일부 주주가 이미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일 단 지분율대로 배정한 다음 다음달 납입

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후에 실권주가 발생하면 제3차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인가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

이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1000억원 규모의 1차 유상증자 역시 이런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증자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2개월이 넘게 걸렸다.

당시 19개 주주사 중 7개 주주사가 증자 불참을 선언했고, 나머지 12개 주주사가 728억원의 자본금을 댔다. 모자라는 272억원 중 신규 투자자인 MDM이 140억원 가량을, 나머지 약 132억원은 전환우선주 형태로 주주들이 나눠 가져갔다.

이번 유증도 실권주에 대비한 신규 투자자 물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증자인 만큼 주요 주주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주주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여기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 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역시 주주들에게는 부

담이다. 자본확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에선 신상품 출시 지연 등 케이뱅크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규제와 경쟁력 약화 등의 악재가 자본확충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규 투자자에 대한 조건 등 주주사 간의 합의도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유증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것은 물론 규모도 최소로 진행됐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이번 유증이 마무리 되는 대로 또 자본확충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초 유상증자 목표규모를 5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가계대출 규제에...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명암

10대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운영  
신용 4등급 미만 금리 16.5% 가능  
중소 저축은행은 기존 금리 낮춰야

금융당국이 중·저 신용자를 중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저축은행 규제에 저축은행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 4등급 미만인 차주에게 금리기준을 18%에서 16.5% 이하로 제한하면서 대형저축은행과 중소저축은행간 반응이 엇갈리는 추세다.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진행되다보니 16.5%의 기준을 맞추기 어렵지만 나머지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을 운영하지 않아 현재 고객의 신



저축은행

/연합뉴스

용도로는 16.5%는 맞추기 어렵다는 것.

이번 규제에 기존부터 중금리 대출을 운영해온 10대 저축은행은 한숨 돌린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거나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할 처

지에 처했다.

중소저축은행 관계자는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고객을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 진행돼 상관없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5%대)을 넘긴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패널티 세부내용을 내달 초까지 확정하기로 하면서 희비는 더욱 갈릴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어선 저축은행은 올해 증가율 제한을 2~6%대로, 5%대를 준수한 저축은행은 증가율 제한을 7%대로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중소저축은행 관계자는 "10대 저축은행의 경우 우량 신용고객을 선별해 대출을 진행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외 업체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진행해 주고 있어 은행 운영을 위해선 5% 증가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널티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2%대로 제한되면 저축은행 운영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몬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가 발표한 '전년 대비 업건별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에 따르면 카드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3배 크게 증가했지만 저축은행은 1.8배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대부잔액은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등으로 지난해 15조 4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5.4% (14조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심화될수록 고금리 대출을 담당하는 중소저축은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롯데, TF구성... 북중러 교류 활성화'서 계속

## 中 동북3성에 대규모 쇼핑 관광단지

'선양 롯데월드' 건설 진행 중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호텔과 연해주 지역의 영농법인 및 토지경작권을 인수했다. 국경 근접 지역인 연해주까지 영역을 넓힌 것이다.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위치한 선양에서는 '선양 롯데월드' 건설을 진행 중이다.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쇼핑·관광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롯데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호텔과 농장, 그리고 중국의 '선양 롯데월드'를 통해 북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영농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이처럼 간 축적되어온 지식과 경험,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북방TF를 통해 북방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북방 지역에 진출해 있는 식품·관

광 계열사들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문화·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는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가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 자재 운송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물류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업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우선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활동을 확대하여 북방지역과의 관계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림의 역량을 모아 정부의 북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상장사 2곳 중 1곳, 사업보고서 기재 미흡"

금융감독, 지난해 보고서 점검

재무사항 부분 전년비 17% 감소

지난해 기업들 절반 이상이 최대주주나 임원 현황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과 주요 계약 사항 기재가 미흡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사업보고서를 중점 점검한 결과, 2275개사 중 57.1%가 비재무사항(8개테마)에 대해 기재가 미흡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2583개사 중 점검 필요성이 적은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해 상장 2040개사, 비상장 235개사가 점검 대상이었다.

'보호예수 현황'이나 '최대주주의 개요' 등 최근 서식이 개정되거나 '연구개발 활동 및 경영상 주요 계약' 등 점검 항목으로 최초 선정된 경우 주로 기재가 미흡했다.

회사의 임원 보수상정기준을 개략적

〈사업보고서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

(단위:사, %)

점검항목	대상(A)	적정(B)	미흡(C)	미흡률(C/A)
① 최대주주의 개요	683	341	342	50.1
② 임원 개인별 보수	512	319	193	37.7
③ 임원의 현황 (부실기업 근무경력 등)	1,983	1,648	335	16.9
④ 연구개발 및 미상환 현황	45	19	26	57.8
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경영상 주요계약	163	8	155	95.1
⑥ 보호예수 현황(2018.1월 개정)	507	209	298	58.8
⑦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2018.1월 개정)	408	270	138	33.8
⑧ 합병 등 사후정보	649	346	303	46.7

으로만 기재하거나 임원의 과거 부실기업 근무경력·학력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신약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건 이상의 다수에 대해 기재가 미흡한 경우도 80개사에 달했다.

재무사항은 전체 2583개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401개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809개사로 33.7%를 차지했다. 전년 50.3% 대비 개선됐다.

요약재무정보에서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금융감독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대해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하겠다"며 "재무사항의 경우 기재미흡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 등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